

건설동향브리핑

제438호 (2013. 11. 25)

■ 경제 동향

- 9월 건축허가 · 착공면적, 주거용 건축 부진으로 모두 감소

■ 정책 · 경영

- 건설기능인력 수급 실태 조사 및 주요 시사점
- 북한 개발 사업시 자금 조달 방안

■ 정보 마당

- 아시아 각국의 건설 경기 및 투자 동향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국회는 부동산 법안 통과 서둘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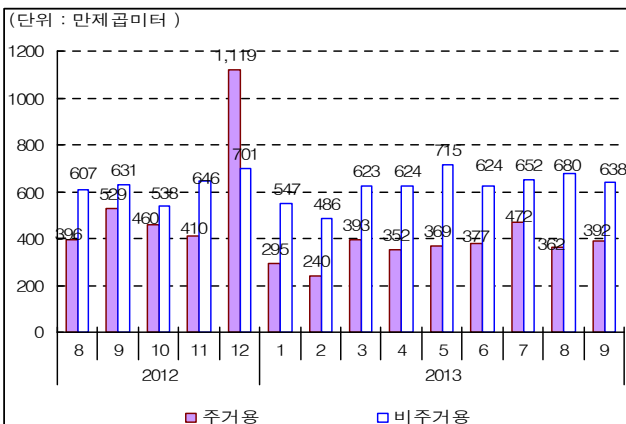
9월 건축허가·착공면적, 주거용 건축 부진으로 모두 감소

- 건축허가면적 11.2% 감소, 건축착공면적도 2.3%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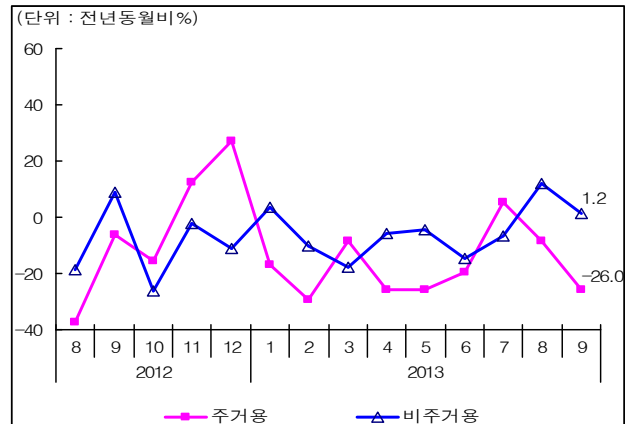
■ 9월 건축허가면적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 8월 3.9% 증가 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 2013년 9월 건축허가면적은 비주거용은 양호했으나, 주거용의 부진으로 11.2% 감소한 1,029.8만㎡를 기록, 지난 8월에 3.9%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함.
- 주거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26.0% 감소한 391.6만㎡를 기록,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해 지난 7월과 8월의 증가세를 마감하였으며, 지방 또한 20.7%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거용은 대부분의 공종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638.3만㎡를 기록함.
 - 세부 공종별로는 기타가 전년 동월 대비 32.0% 감소해 부진했으나, 상업용과 공업용이 각각 5.1%, 27.2% 증가하였으며 교육·사회용도 39.9% 증가함.
- 결국, 1~9월 누적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7월 간의 감소세와 9월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8,839.4만㎡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 주거용이 17.4% 감소한 3,250.4만㎡를, 비주거용이 5.3% 감소한 5,588.9만㎡를 기록함.

<건축허가면적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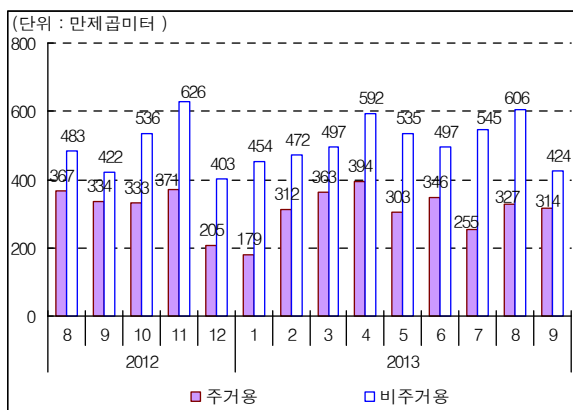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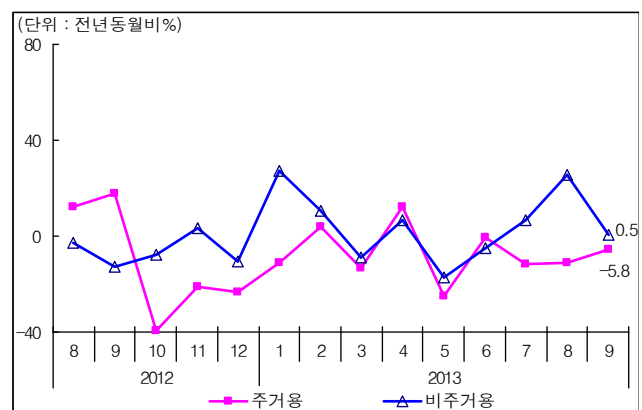
■ 9월 건축착공면적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 2개월 연속 증가세 마감

- 2013년 9월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738.7만㎡를 기록, 지난 7~8월 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 주거용은 수도권에서는 양호했으나, 지방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314.4만㎡를 기록,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44.6% 증가한 137.2만㎡를 기록하여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반면, 지방의 경우 아파트 분양의 감소로 17.1%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거용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424.3만㎡를 기록, 3개월 연속 증가함.
 - 세부 공종별로는 상업용과 교육·사회용이 각각 5.0%, 20.6% 감소해 부진한 반면, 공업용과 기타가 각각 13.2%, 7.1%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1~9월 누적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5월과 6월, 그리고 9월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7,417.0만㎡를 기록함.
 - 비주거용이 0.5% 증가한 4,624.2만㎡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주거용이 5.8% 감소한 2,792.8만㎡로 부진하였음.

<건축착공면적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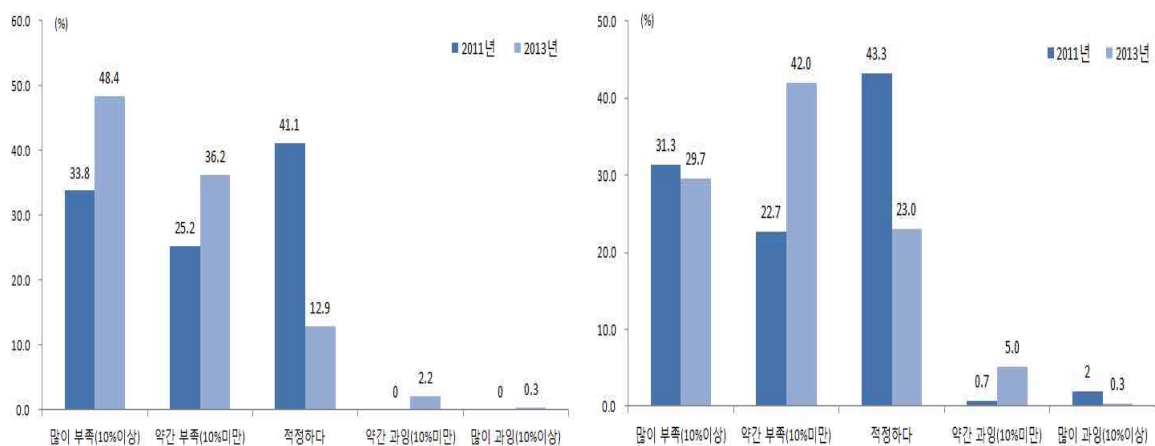
건설기능인력 수급 실태 조사 및 주요 시사점¹⁾

- 고령화로 숙련인력 기반 붕괴, 공급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육성 대책 시급 -

■ 수급 실태 : 고령화 및 부족 정도 심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 ‘2013년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기업 대상)’ 결과, 2011년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52.0세, 비숙련인력은 47.0세로 나타나 2010년²⁾에 비해 각각 2.8세와 4.8세가 증가하였음.
 - 한국인 숙련인력의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근로자와 건설기업 모두 ‘공장 제작과 외국 인력 도입을 병행해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응답에 의하면 ‘임금 인상’이 가장 많음.
 - 외국 인력의 규모에 대해 ‘전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많은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 저하 및 일자리 감소’가 많고, 외국 인력의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의 기반이 무너진다’가 가장 많음.

<한국인 숙련 인력 수급 상황(건설기업 응답)> <한국인 비숙련 인력 수급 상황(건설기업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기업 대상), 2011.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기업 대상), 2013. 9

1) 본고는 ‘2013년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조사 기간 : 2013. 9. 6~10. 4
 -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부수 : 근로자용 728부와 사업주용 320부, 총 1,048부
 2) 2011년 설문조사에서는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에 대한 항목이 없어 2010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음.

■ 향후 5년 간 수급 전망 : 숙련인력 부족 심화

- 기능인력의 수요는 미미하게 증가하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
 - 한국인에 국한하여 수급 차이를 전망하면 2014년에는 7만 7,559명이 부족하고, 점차 부족 정도가 심화되어 2018년에는 21만 8,62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인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 2014~18>

연도	건설투자 전망(억원) (2005년 기준)	인력 수요(명)(A)	내국인 공급(명)(B)	내국인 수급 차이(명)(B-A)
2014	1,510,600	1,382,975	1,305,416	-77,559
2015	1,521,930	1,385,583	1,275,506	-110,077
2016	1,533,344	1,388,211	1,243,327	-144,884
2017	1,544,844	1,390,859	1,209,534	-181,325
2018	1,556,430	1,393,526	1,174,902	-218,62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기업 대상), 2011.10

■ 임금 수준 : 일일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근로일수 감소로 연간 임금 수준 하락

- 숙련인력의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 주도형 임금 상승’의 폐해 우려
 - 일일 임금은 평균 14만 7,456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평균 2만 7,946원이 인상되었음. 하지만 근로일수를 곱해 환산한 평균 연간 임금은 2,536만 8,986원으로, 176만 7,850원 감소했음.
 - 일당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 임금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저가 수주로 노무비가 부족해지자 외국 인력을 많이 고용하면서 내국인의 근로일수가 감소한 결과로 풀이됨.
 - 숙련인력의 육성에 평균 5년이 소요되므로 향후 그 폐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주요 시사점 : 직업 전망 제시를 통한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육성 시급, 적정 공사비 확보 필수

- 외국 인력에 대한 적정 도입 규모 산정 및 불법 취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필요
- 임금 개선을 전제로 한 훈련 시설 확충 및 현장과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 필요
- 숙련인력 육성 기간을 고려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훈련 계획’ 필요
- 내국인 고용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기본 여건으로서 건설기업 간 ‘제 살 깎기 수주 경쟁 억제’를 통한 노무비 확보 및 전달 체계 필요

심규범(연구위원 · gjbshim@cerik.re.kr)

북한 개발 사업시 자금 조달 방안¹⁾

- 한국 정부에 의한 자금 조달이 가장 현실적, 국내외 민간 자본 활용 모색도 필요 -

■ 북한, 외국 자본 통한 개발 사업 추진 모색

-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고, 몽골의 참여도 예상
 - 중국은 항만 및 철도 사업 본격화, 라진~원정리 도로공사, 관광 및 농업 협조, 중국 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 사업 등을 추진
 - 러시아는 나진~햏산 간 철도 개통(2013.9) 및 나진항 제 3부두의 독점 사용권 확보
 - 몽골은 자국의 지하 자원의 수출 통로로 나진항 사용을 북한에 타진
-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해주(강령) 경제특구와 3개 관광특구(원산·백두산·칠보산) 개발을 모색
 -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는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
 -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 금융·첨단산업 등의 거점이 될 경제특구를 계획, 아시아 각국과 유럽·미국 등에 총 5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희망
 - 원산을 국제 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갈마비행장과 마식령스키장의 개발을 추진,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220km) 및 함흥~원산 간 고속도로(160km)의 개·보수 등 모색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금년 5월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의한 경제개발구를 총괄·지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경제개발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교적 소규모의 자체 '개발구'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 최근 13개 신설 개발구를 발표
 - 13개 신설 개발구는 약 16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목표, 개발구별로 지역 실정에 맞춘 약 1.5~8km²의 중소 규모 사업 추진을 구상
- 북한은 중국과 대만 등에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 구간의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투자·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총 투자 규모는 철도복선 9조 4,000억원, 고속도로 4조 7,000억원 추산, 북한은 BTO

1) 본고는 대한토목학회와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1월 18일에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건설 인프라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북한 개발 사업시 자금 조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

■ 남북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시 국내 건설업계 참여 가능, 자금 조달 방안 강구 필요

- 북한 인프라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립적 재정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시·군 단위의 도로 및 공공 건물,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희천발전소 등의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과 동원되는 노동력의 식량 지원 등을 주민들이 자체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의 북한 당국의 재정난이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개발 자금 조달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임.
 - 북한 개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가능, 기금의 활용처로 ‘대북 차관’, ‘사회간접 자본시설 자금 대출’이 있음(남북협력기금, 2013년 9월 현재 11조 3,589억원 조성).
 - 남북 간 관계 진전도와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 필요
 - * 일반회계 증대, 조세 부과, 타 기금 분담, 채권 발행,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수입금, 공공기관 매각 등
- 북한 개발 자금을 정부 자문에 의존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고 적시에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내외 민간 자본의 활용 필요
 - 북한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활용시 사업의 위험성 해소와 표준 사업 절차 등을 제도·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 공동 민간투자 지원기구’ 설치 필요
-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되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
 -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에게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역량의 강화, 시장 경제 전수, 국제 관례 연수 등 기술 지원을 공여
 - 국제 민간 자본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노력에 대한 IMF, 세계은행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
-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과 투자가 시작되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협력자 또는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 대북 개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역량 확충 필요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아시아 각국의 건설 경기 및 투자 동향¹⁾

-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유도 -

■ 일본 : 2013년 공공 건설투자 전년 대비 11.5% 증가, 건설 경기 회복 국면

- 2012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473조원이었으며, 그 중 199조원은 공공투자, 274조원은 민간투자였음.
 - 1990년대 후반기 이후 지속되었던 공공 발주시장의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2003년 이후 일본 경제는 연평균 약 2%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며, 이것은 일본 경제 회복의 신호로 간주되고 있음.
- 2013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5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공투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220조원으로 전망되었고, 민간 주거 분야 투자는 연말부터 시행될 소비세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여 전년 대비 7.0%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 2013년 건설투자 10.6% 성장 목표

- 2012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0.0% 증가한 39조 6,000억원을 기록
 - 민간투자는 전년 대비 33.4% 증가한 33조 7,000억원을, 공공투자는 24.0% 감소한 5조 9,000억원을 기록
 - 2012년 인프라 투자는 14조 2,000억원, 비주거 건축 12조 8,000억원, 주거건축 10조 4,000억원, 사회편의시설 2조 2,000억원을 기록
- 말레이시아 건설투자는 민간과 공공의 투자 비율이 85:15로 민간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간투자를 독려하여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1) 본고는 2013년 11월 14~15일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9차 ASIACONSTRUCT Conference'에서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인프라 투자가 전체 건설투자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액 중 27.9%는 민간 자본으로 교통시설 및 수도·전기·가스 등의 시설에 투자되고 있음.
- 2013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은 4.5~5.0%로 전망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에는 10.6%, 2014년에는 9.6%의 건설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싱가포르 : 공영 주택 및 토목 사업에 역점 두고 공공 건설투자 확대

- 2012년 건설 투자액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26조 600억원을 기록
 - 공공투자는 전년 대비 37.8% 감소하여 8조 6,000억원을 기록
 - 대형 의료시설 건설 수요에 힘입어 건축 분야 건설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음.
 - 2012년 민간투자는 주거단지의 개발과 상업용 빌딩 건설 수요의 증가로 전년 대비 5% 상승한 18조원을 기록
- 2013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2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건설산업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며, 향후 2년 간 토목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공영주택 건설투자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 해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용 건축투자는 2012년 2조 6,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3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 공공 건설투자의 비중이 2012년 31%에서 2013년에는 46%로 대폭 증가했음.

■ 홍콩 : 공공 사업에 기반한 건설투자 증가세

- 홍콩은 공공투자를 주축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하여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끌고 있음.
 - 2012년에는 민간투자가 다소 위축되었고, 공공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음.
 - 2009년 이후 공공사업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7조 1,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4조 2,000억원(2011년 대비 34% 증가)을 기록
 - 토목사업에 대한 공공투자는 2009년 1조 7,000억원, 2010년 2조 8,000억원, 2011년 4조 1,000억, 2012년 5조 9,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 14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인력기재과 주최, '중장기 골재 수급 계획 지자체 협의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지자체 부존량, 채취량, 수요량 등 협의
11. 18	대한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건설업의 기술 개발/자금 지원 연구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 참여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자문
	서민금융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국제주택금융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
	대한토목학회 / 대한건축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건설 인프라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북한 개발 사업시 자금 조달 방안
11. 19	건설주택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주택포럼 정기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주택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틀의 필요성
11. 20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감독국 주최, '거시금융감독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거시경제 부문별 토론
11. 2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전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3차 전체 회의 안건 최종 검토
	국회 남경필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가 모델 연구 모임'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토론 주제 :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1. 22	K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B 거시경제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14년 거시경제 지표 전망에 관한 부문별 점검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10차 분과위원회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분과위원회 처리 분쟁 조정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국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윤영선 연구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

■ 「2013년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참여

- 연구원은 2013년 12월 4~6일 간 일본 마쓰시마에서 개최되는 「2013년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
-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 건설 전문가들의 양국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임.
- 이번 워크숍에는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이 '건설 인력 고령화 대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임.

국회는 부동산 법안 통과 서둘러야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당론과 정치적 이해 관계가 아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니만큼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핵심 민생 법안의 처리를 두고 보이는 여·야의 모습은 헌법 규정을 무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상대방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여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불 멘 소리나 하거나, 당론으로 반대 입장이 정해진 터라 다른 정치적인 의사 표시가 곤란하다는 너살좋은 핑계를 대기에만 바쁘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시장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관한 법안 처리를 기다리며 병어리 냉가슴 앓듯 애간장만 녹이고 있는 중이다.

가장 시급한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장에 민간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여·야 간에 빅딜이니 하면서 언어 유희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부동산시장의 눈과 귀가 되어 발로 뛰고 있는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의 대변자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참다못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두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기약 없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1순위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미 올해 정부가 내놓은 4.1 대책이나 8.28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향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마저 쏟아내고 있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벌써 늦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이제라도 당략과 정략적 발상이 아닌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 차원에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구한다. <서울경제, 2013. 10. 31>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